



청주 '비닐 대란' 없다더니...업체 수거 거부에 무대책

2018-05-01 17:24 청주CBS 장나래 기자

"폐비닐 종량제에 넣어라" 불법 사실상 종용...시가 수거해도 소각행



청주의 한 아파트에 폐비닐 수거를 전면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.(사진=청주 CBS)

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없었던 충북 청주에서도 최근 재활용 업체가 폐비닐 수거 거부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하지만 단속을 해야 할 청주시는 대책이 없다며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불법 행위를 묵인

하고 있다.

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안내문이 갑자기 나붙었다.

수거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마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라는 것이다.

한 주민은 "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도 다 종량제에 담으라는 거 아니냐"며 "부피가 커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다른 쓰레기를 담기가 힘들다"고 하소연했다.

하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.

불법 행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실상 종용한 셈이다.

이 업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"그동안 업체에서 비용 문제로 수거가 어렵다고 호소해왔다"며 "4월까지의 어떻게든 가져가 처리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이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"고 말했다.

더 큰 문제는 청주시가 불법 행위임을 알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.

청주시 관계자는 "중국발 폐비닐 수입금지에다 고품 연료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에서마저 재활용이 축소돼 별다른 방법이 없다"며 "현재는 일부를 쌓아두거나 환경오염 기준치를 넘지 않을 양만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소각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"고 말했다.

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366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%가 넘는 곳에서 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더욱이 시가 직접 수거하는 10%의 경우도 모두 소각장으로 옮겨져 폐비닐 재활용은 말 뿐이었다.

청주시가 폐비닐 소각이라는 사실상의 불법을 눈 감는 사이 주민 혼란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.

이 기사 주소: <http://www.nocutnews.co.kr/4963512>